



전라도가 좋다, 전라도 외국인

<1>프롤로그

국내 상주 외국인 '150만 시대'
전남 8만 돌파... 영암 1만1천명
광주·전남, 이주 사회로 진입
이주민 향한 편견·차별 거두고
다문화 포용으로 공동체 일궈야

한국을 생활 터전으로 삼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다.
전남지역도 지난 2023년 11월 기준 외국인 '상주' 인구가 8만 6729명으로 처음으로 8만명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9.8%가 늘었는데, 충남(11.4%), 전북(10.1%) 다음으로 많다. 광주도 4만 6859명이다.
행안부의 이 통계는 91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 체류기간을 넘어선 불법체류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및 미성년자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미성년자녀를 합한 수치다. 외국인 주민은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영암지역에 가장 많다. 영암에만 1만1077명이나 된다. 영암 인구(2024년 말 기준 5만 1391명)의 21.6%에 달한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로만 분류하면 여수(1565명)가 가장 많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가 2만 6485명으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았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전국 자치단체 중 전남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외국인 전담 부서다. 전남도는 3개과 규모의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이민정책·외국인지원·다문화지원팀을 총괄할 이민정책과를 설치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를 비롯, 외국인 이주·지원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가 전년보다 97% 늘어난 7221명에 이르는가 하면, 전남 논·밭에서 일한 계절근로자도 4055명이나 됐다.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공익 광고 캠페인.

광주·전남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도 못 짓고 배도 못 만들고 공장 돌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됐다.
서울·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사이, 외국인들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일손 부족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료', 일상을 공유할 '이웃주민'이 됐다.
지난 2023년 11월 기준 행안부가 집계하는 전남지역 외국인 '상주' 인구는 8만 6729명으로, 화순(6만735명), 담양(4만 4623) 인구보다 많다. 10년 전인 2015년 5만 864명이던 외국인 주민은 2018년 6만명, 2022년 7만명을 넘어 서더니 8만명을 뛰어 이제 10만 명을 돌파할 기세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1만 6610명에 이른다.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증가세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5만 7819명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5년 전(3만 4638명)에 견줘 무려 66.9%(2만 3181명)나 늘었다. 광주·전남은 사실상 이주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의 단기 고용 인력이 아닌, 생활인구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남을 비롯, 지자체들이 앞다퉀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인식도 그만큼 성장했을까. 한국 사회의 토양은 이들이 뿌리 내리기에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내놓은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광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외국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72.5%가 한국인으로부터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위협을 당한 경험은

37.6%, 폭언 또는 폭행당한 경험도 35%로 조사됐다.
외국인 주민 10명 중 2명은 가끔 상점이나 카페, 음식점 등 상설 시설 종사자가 차별 대우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고 외국인 주민 9.2%는 상사나 고용주 등 일터의 관리자 일터의 관리자로부터 자주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자격증과 박사학위까지 있어도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힘든 다문화가정 이민자들도 여전하다. 돌봄·가사노동에 대한 '저임금 프레임'이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는 분위기도 걱정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주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문화 포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시급하다.
전남도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전남'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4개 분야에서 26개 실천 과제를 마련, 추진중이지만 현장과 정책 간 온도 차이도 감지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도, 현장의 차별적 인식과 대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광주·전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지역민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싶은 친한 이웃, 절친으로 생각하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 광주일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주민과 협력, 공존하면서 다양성 가득한 지역 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와 영광군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제 10회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춤이 소개됐다. <전남도 제공>

